

데스크 시각



김대성 제2사회부장

며칠 전 지인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지방소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당연히 출산을 하라 원인에 대한 얘기로 이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의식주를 충분히 보장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참여자가 다소 엉뚱한 얘기를 했다. 요즘 나는 자연인이 다'나 '나혼자 산다' 등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인기인데, 이것이 인구 증가엔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홀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재미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인구 감소를 부추기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의 역할

우스갯소리라고는 하지만 미디어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려하면 다소 의아한 제안이라도 색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초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이 온 나라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방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데다가 수도권으로 향하는 인구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남의 경우 인구 180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데

지방소멸 위기 대안을 찾아라

다 올해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 여주시와 나주시까지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될 정도로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다 고령화 등으로 일손마저 턱없이 부족해 농산어촌의 고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남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00억 원을 배정받아 3년 연속 전국에서 최다 금액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간 연 1조 원씩 지원하는 재원으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500억 원,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7개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 원을 지원한다.

광역기금은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며 기초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 인구 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내년도 광역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역 활성화 펀드에 광역기금 1000억 원을 출자함에 따라 애초 배분액 508억 원 대비 204억 원이 감액된 304억 원을 배정받았다. 기초기금은 총 4개 등급으로 S등급 144억 원, A등급 112억 원, B등급 80억 원, C등급에 64억 원을 배분하며, 최고·최저 등급 간 차이는 지난해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전남의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은 평가결과 A등급 3개소(강진, 곡성, 해남), B등급 8개소(구례, 보성, 장흥, 영광, 함평, 장성, 완도, 신안), C등급 5개소(담양, 고흥, 화순, 영암, 진도)로 지난해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총 1296억 원을 배정받았다.

우리 사회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이상한 기금까지 만들어 국가적 위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심각한 처지에 몰려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제시한 지방소멸 위기에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열린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이민청 설립과 광역비자 전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광역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에는 인구청년이민과를 신설하고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극복 위한 방향과 실천적 대안

계절근로자(E-8)의 100%, 고용허가제(E-9)와 유학비자(D-2)의 50%를 광역으로 이관하는 광역비자 전면 시행을 건의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정주 대상으로 보고, 단속보다는 성실 노동자에게 가족 동반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방소멸 극복 방안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공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실현,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교육 확대를 제시했다. 2025년부터 직업계 고교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직업고등학교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 만큼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출산장려책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방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라는 각오 정도는 해야겠지만, 다소 의외의 발상이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적용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은편칼럼



한국환 경영학 박사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된다. 이념 논쟁을 멈추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방향을 '국민의 뜻'과 '민생'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는 여론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으나 10월 보선 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여론'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기 방식(My way)'으로 국정을 운영했음을 방증하고 있다.

조선시대 임금들도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신하들의 말을 경청했으며 상소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쓴소리'를 정규방송 뉴스까지도 기준이나 팩트(fact)가 명확하지 않은 소위 '가짜뉴스'로 폄하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운영 시스템이 갖춰져 역대 대통령들이 74년 동안 사용했던 청와대를 놔두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백

대통령, 미래지향적 리더십 가져야

억 원의 혈세를 들여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사실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과의 소통 여부 정도는 국정 지지율에 달려 있다. 현 정부는 인적자원의 한계(서울대·60대·남성·검사 중심)와 근무시간(주 최대 69시간) 문제, 여성가족부 존폐, 비정상적인 R&D 예산 삭감, 또한 한미일 중심의 편중 외교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드러난 외교와 정보 역량 부재 등 여러 정책 혼선으로 국정 신뢰도가 깨졌다. 게다가 과반수가 넘는 야당을 협조와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 법안마저 거부권을 계속 행사(3회)하여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훨씬 높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인데 지난 보선 패배를 통해 국민 여론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윤 정부는 그동안 너무 비싼 수업료(집무실 이전 비용·낮은 지지율·정책 혼선 등)를 지불하고 학습한 셈이다.

연말엔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가 큰 이슈다. 인구의 약 51%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OECD 26개국 중 수도권 출립이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서울 확장정책(메가시티)'은 곧 지방소멸을 가속시킬 수 있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 수도권은 의료, 교육, 일자리, 자본 등을 거의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고조되고 있는데 거기에 인구가 더 밀집되면 출산을 감소(한국은행 자료)로 이어지며 결국 지방은 없고 '서울민국'만 남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경기도민 66%의 서울 근교 도시 편입 반대, 김포시민 62%가 편입 반대 여론(리얼미터 11월 12일)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당장 내년 총선용 정책들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다음 선거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미래 나라를 걱정해야 한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대통령 "지방에 여러 권한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당발 메가시티 서울 발표는 당장 간 잊박자로 미속한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이번 선거용 당리당략적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간 국민 갈등을 조장하며 지금까지 20년 넘게 주장해온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방향을 흔들고 있다.

"리더는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보스는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고 하듯이 국가 통치자는 비서진 말보다 국민의 외침에 더 귀를 기울이며 공감하는 소통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 지난해의 '도어 스테핑(약식 질의응답)'도 사실 국민의 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기자들 질문은 사실 국민을 대신한 물음이다. 듣기 좋은 말도 거슬리는 말도 다 듣는 시간이다. 당시 한 기자의 귀에 거슬리는 질문 때문인지 그 이후 중대한 윤 대통령은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본인 스스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듯이 진정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중단된 도어 스테핑이나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서 그 뜻을 살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 국가이며 국민의 뜻을 헤아린 미래 지향적 리더십이다.

社說

해저 전력고속도로 건설...전남이 최대 수혜

정부가 남아도는 전남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해저망을 통해 수도권 산업 단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일명 '서해안 해저 전력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원전을 키우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제 방문규 장관 주제로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력계통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초고압 직류 송전망인 전력고속도로를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관심은 단연 해저로 전력고속도로를 까는 서해안 사업이다. 서해안 전력고속도로는 신해남-태안-서인천 구간 430km와 새만금-태안-영흥 구간 190km 두개 코스로 7조 9000억 원을 들여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해남에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노선은 영광 한빛원전 1-6호기에서 생산되는 5.9기가와트(GW)와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송전하게

된다. 현재 전남에는 국내 태양광 설비의 43.4%인 8.8GW가 집중돼 있다. 이렇다 보니 남아도는 신재생에너지를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해 올해부터 전남에서도 출력제어(발전중지) 조치가 시행돼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육상으로 송전망을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도 해저망을 선택한 배경이다. 해저 전력고속도로 건설로 신재생에너지 메카인 전남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수도권에는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 공장 등이 밀집해 있는데 전력 생산과 공급 지역 불일치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단전으로 공장 가동이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송전망은 국가의 주요 인프라로 정부가 한전에만 맡겨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젠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는 일이 남았다.

잇단 가족범죄, 가정 의미 되새기는 계기 되길

최근 광주·전남에서 가족 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0대 엄마-6개월 딸, 70대 남편-60대 동거녀, 시아버지-며느리, 아들-계모 등 범행을 저지른 가족 형태도 다양하다. 가정 내 불화가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부부싸움 끝에 25세 친모가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비정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친모는 사건 이후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70대 남편은 5년간 사실흘 관계에 있는 60대 여성에게 수차례 돈을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어울린다는 의처증과 질투심이 원인이었다.

또한 70대 시아버지가 40대 며느리를 살해하려한 사건도 발생했다.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해도 듣지 않자 흥기를 구입해 며느리 거주지 주변을徘徊하다 체포됐다. 중장비 사고로 아버지를 여읜 30대

아들이 50대 계모와 상속재산 문제로 다투다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족 간 범죄 원인에 대해 경제난과 고용 불안, 치열한 경쟁 속 불안·분노, 가족 구성원간 소통 부재 등을 꼽는다. 경제적 문제와 가족 간 정서적인 교류 단절에서 유발된 가정불화가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족 간 범죄를 한 개인의 범죄로만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빈발하는 가족 간 범죄에서 표출되듯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의 가정이 해체 위기에 놓여있다. 인륜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면 나아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잇단 가족 범죄를 새삼 가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공동체 해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족 구성원의 유대를 다지고, 가정의 소중함을 재확인해 회복하려는 범사회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無等鼓

가끔 10년 후 광주의 모습을 생각해본다. 지금보다 매력과 아름다움이 더해져 시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높아지고 타지에서 광주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오는 발길이 더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도처에 늘어선 고층 아파트의 시멘트 벽에 가로막히고 곳곳이 자동차로 가득한 삭막한 도시의 대명사가 될 것인가.

도시 및 국토 개발이 시작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사유지와 공유지를 구분한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넘어온 일본인들에게 한 값에 공유지를 넘겨줬다. 그들이 지배계층으로 자리를 잡아

집중된 탓이다. 해방과 6·25 전쟁 이후 그 혜택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쪼개거나 하천변이나 도로 등 그나마 남아 있는 공유지를 점유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건축 기술이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주거 모델은 오로지 아파트였다. 좁은 부지에 높게 지을 수 있었으니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주택 공급이라는 공적 기여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아파트를 짓기 위한 난개발이 이뤄

지고 상품처럼 거래됐다. 그 결과 대로, 골목길, 언덕 위, 공원, 학교 등 어디든 거대한 시멘트 건물이 가득했다.

이제 100년이 넘는 광주 근·현대의 역사 속에서 개발이 과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는가를 되돌아봐야 할 때다. 광주의 개발 인허가는 앞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반드시 그 내용이 사전에 공개돼야 한다. 공유 공간의 대거 확대, 주택 수요 맞춤형 공급, 거리와 상업의 부흥 같은 처방도 시급하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기고



박복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본부장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14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800만 명의 관람객 유치 목표를 일찍이 달성하고 성공적인 국제 박람회가 됐다고 할 만큼 대박을 냈다. 관람객 980만 명 달성, 수익금 333억 원 모금이라는 정량적인 성과 외에도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생태도시·사람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 도시 모델을 창조했다는 평가다.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지 10년 만에 순천은 대한민국 국가 정원 제1호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웰빙, 워라밸 등 자연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현재의 사회 문화적인 코드와 함께 지역 스스로가 비교 우위 성장동력으로 정원 콘텐츠를 도시 전반에 접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결과 '생태친화형 정원 도시'는 순천의 유일무이한 도시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이제 순천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시의 애니메이션 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원 도시 순천을 한 단계 도약시킬 넥스트 플랜으로 일본의 애니메이션 테마파크인 지브리파크와 미국

생태 콘텐츠 갖춘 순천에 거는 기대

의 디즈니랜드와 같은 'K-문화콘텐츠산업특구', 정원과 첨단기술,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한국형 디즈니 육성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는 40여 개의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과 선도 기업을 순천에 유치해 웹툰, 음악, 영화, 캐릭터 등 문화산업 전 분야로 확장하는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링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실현 여부를 떠나 전남에서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화 전략과 특구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한류 4.0시대를 이끌어가는 K-콘텐츠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에도 국가경제를 견인할만큼 성장했으며 이미 13대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가전제품 수출액을 추월한지도 오래다.

전남도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6년부터 게임, 웹툰, 영상을 비롯한 콘텐츠 장르별 제작부터 인프라 조성,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기획-제작-유통의 콘텐츠 산업 생태계 밸류체인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순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디즈니 계획, 콘텐츠 산업 특구 조성은 전남의 콘텐츠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애니메이션 제작 메인 프로덕션 기능을 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순천대 글로벌대학 30사업을 통한 지역-대학-기업-기관을 연계한 디지털 인재 양성, 전남도의 정책, 예산 지원과 진흥원의 인프라와 기업지원 노후가 합쳐지면 지역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빠질 수 없는 게 전남 콘텐츠 산업의 정체성이 될 원

천IP다. 디즈니와 지브리의 닭은 꿀을 만들자 접근하면 전남의 콘텐츠 산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미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K-변종을 만들어야 한다. 전남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순천은 순천만과 국가정원이라는 흥행이 보장되어 있는 '생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생태자원을 소재로 메타버스, 현실확장 실감기술 등 신기술을 결합한 친환경 생태 콘텐츠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영화 등 콘텐츠 산업의 장르적 확장을 이뤄야 한다.

여기에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생산과 소비의 연계, 유망 앵커 기업의 유치, 지역 정주를 전제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고 도시 전반을 포괄하는 지방소멸 대응 모델 마련 등이 수반되는 콘텐츠 산업 특구가 조성된다면 전남은 더 이상 콘텐츠 산업의 변방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4년 콘텐츠 산업을 '퍼플오션'이라 전망했다. 퍼플오션은 경쟁 포화상태인 '레드오션'과 기회시장인 '블루오션' 사이 중간 영역을 말한다. 즉, 컴퓨트프를 위한 숏그리기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움직임의 단계인 것이다. 전남에서의 콘텐츠 산업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역이라는 열세와 비주류 산업인 콘텐츠 산업 자생의 선순환체계가 형성되고 주력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퍼스트 펌프'이 절실하다.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형 생태 콘텐츠 클러스터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회장·발행인 <b>金汝松</b>	논설실장 <b>張必洙</b>	편집총괄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